

예결위, 감액 예산안 673.3兆 처리

與 “사과·철회 강력 촉구” vs 野 “합의 불발 등 부득이 상정”

與 “예산 심사권, 정쟁 도구 삼아 정당 겁박하는 예산 폭거·의회 폭력”
野 “與 ‘방탄예산’ 주장 터무니 없어 尹, 예비비 4.8兆… 사업예산은 삭감”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태호 기획재정부위원회 간사./뉴시스

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한 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국이 급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1월29일 여야 합의 없이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주로 정치권에서 쟁점으로 증·감액 이견이 큰 예산이 감액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감액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덜어낸 673조3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서 예비비 2조4000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별비 4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 줄었다.

거대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은 증액을 추진하던 지역화폐 예산 2조원까지 포

기하면서 감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與 “먼저 사과하고 감액안 철회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

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꿈수는 아예 접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선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재해 대응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

했다.
◆野 “방탄 예산 주장은 터무니 없어… 부득이 상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역대 정부에서 예비비는 1조 5000억원 이상을 사용한 예가 없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했다”며 “반면 효율성을 운운하며 각종 사업예산을 무려 24조원이나 삭

감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측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권력기관이 특활비 등의 삭감에 반발하는 것에 “검찰이 특활비를 깎아서 수사를 못한다고 한다”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허 간사는 “이미 100억원에 달하는 마약수사비용이 있고 민생범죄 비용도 있다. 그 돈을 집행하면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그 돈을 다 집행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다. 집행하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라”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장, 여야에 만찬 제안…與 거부

한편, 우원식 의장은 얼어붙은 정국을 중재하기 위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현안을 논의한 만찬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 개의 전에 시간이 남아있으니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관련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헌정 사상 초유로 다수당의 힘으로 예산안을 단독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라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당분간 민생행보 집중하며 인적쇄신 준비

금주尹 주재 민생토론회 열려
與野, 예산안 두고 대치 심화에
인사개각 연초로 지연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린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당분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을 두고 여야의 대치 수위가 올라가고 있어, 개각 시점이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린다.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다. 정부는 앞서 7월과 10월에 총 36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책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라고 지

시했고, 이번 토론회에서 그 결과가 발표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종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노쇼 등 주요 애로 사항 및 규제사항 해결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 수의 95%를, 고용의 46%를 차지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될 소상공인 지원책은 윤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위한 첫 정책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청년

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책도 고심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이 같은 민생 행보에 집중하며, 인적 쇄신 시점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내각과 참모진 개편을 위한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2025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달 2일 이후 인사발표를 염두하고 검증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졌다.

이날도 여야는 예산안을 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

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못박았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인선까지 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내각이 움직여야 하는 시점에서, 개각을 단행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이 때문에 개각 시점이 연내가 아니라 연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지난해 12월 21일에 처리됐으며,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12월 24일 처리된 바 있다. /서예진 기자 syj@

李, 대구·경북서 외연확장 시도… 지역화폐 필요성 설명

이철우 경북지사 만나며 TK 일정 소화
경주 APEC 예산 증액 관련 논의도

으로 본격적인 TK 일정을 소화했다. 이대표는 TK 지역에 머물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119 구급대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행보도 펼친다. 이대표는 2일엔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로 복귀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철우 지사에게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지사가 경북 지역의 인구 소멸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

자 이대표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은 대구하고 통합해 장기적으로 광역화해야 한다고 본다”며 “(저의) 대선 때 공약도 그렇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으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독립성, 행정자율성, 자치분권 강화도 해야 한다. 어쨌든 집중화를 막는다. 지방 안에서도 집중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법 중 소단위 경제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중 하나가 그 안에서 돈이 돌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도 어느 정도 지역인지 중요하다”며 “경북 영양군에 1만5000명이 사는데, 지역화폐를 돌려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이대표는 “경기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곳이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 월에 15만원씩 지역화폐 지원 정책을 했는데, 그 동네에 미장원이 생겨서 동네사람들이 미용도 하러가고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

사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 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감액만 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처리한 것을 두고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증액에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대표는 “제가 챙겨보겠다”며 증액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대표는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할 하는 사안”이라며 “증액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면 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